

이달의 초점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준비지원의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 이소정 |

노후준비서비스 운영 사례와 과제

| 성혜영 |

노후준비의 현황과 과제: 2024년 노후준비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 황남희 |

노후준비수준에 따른 집단 유형화와 함의

| 이해정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과 현황

The Rationale and Current Status of the Old-Age Preparation Support System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휴먼케어학과 교수

노후준비지원제도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조건에서 등장한 정책이다. 노후준비는 길어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소득, 건강, 관계, 여가, 삶의 의미를 미리 설계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확장하는 과정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년기의 빈곤·질병·고독·무위를 사전에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적 근거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전달체계를 갖추었음에도 하향식 제도화, 낮은 대중적 인식, 애매한 정책 정체성, 중앙·지방 거버넌스의 불명확성, 플랫폼과 콘텐츠의 한계로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중앙의 표준화·플랫폼 기능과 지자체의 지역자원 연계를 결합한 거버넌스, 그리고 숫자로 환원되지 않는 삶의 변화까지 포착하는 예방적·투자적 관점이 필요하다. 노후준비지원제도의 성공은 한국 복지국가가 사후대응 중심에서 예방적·역량강화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 복지제도가 한창 구축되어 나가던 2000년대 정책 전문가 집단이 가장 주목했고, 판단의 귀중한 원천으로 여겼던 것은 ‘외국 사례’일 것이다. 국내의 축적된 정책 경험이나 장기적 평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던 당시에 정책 전문가들은

이미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서구 국가들의 제도와 성과를 일종의 검증된 선례로 간주했고, 외국 사례는 정책 설계의 정당성, 방향성,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준거로 활용되었다. 그런데 ‘노후준비지원제도’는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벤치마킹하지 않은 고유의 정책이다. 여러 지표가 보여 주듯 한국은 노후가 취약한 사회인데, 이는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생애 문화와 맞물린다. 한국의 중장년층은 오랫동안 자녀 교육과 결혼, 주거 마련을 부모의 핵심 책임으로 받아들이어 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노후 자원은 후손위로 밀려났다. 또한 산업화 세대의 강한 일 중심적 가치관은 은퇴 이후의 여가, 관계, 자기돌봄을 준비하는 경험을 빈약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가족부양 규범의 약화, 노동시장 불안정, 주거·금융 환경의 급변이 겹치면서 과거의 삶의 방식만으로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어려워졌다.

노후준비지원제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장수화에 대응하여 국민이 노년기의 빈곤·질병·무위·고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신의 노후를 주체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제도화되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영역의 노후준비 수준을 진단하고, 상담·교육·관계기관 연계·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사실 일상생활에서 지인과 인사처럼 던지기도 하는 용어인 ‘노후준비’는 매우 친숙하다. 그러나 복지제도로써 ‘노후준비’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다. 일반 국민은 물론 학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생소하다. 이런 맥락에서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법안이 존재한다는 사실, 더욱이 법이 제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생경하다.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으나 10여 년이 지나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조차 않은 노후준비지원제도는 한국의 정책 도입 및 추진 과정에 대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제도이다. 법적 기반,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전달체계와 인프라를 갖춘 정책이 이토록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글은 노후준비지원제도가 발전해 온 과정과 의미를 짚어 보며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지 논의하고, 제3차 노후준비기본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노후준비의 필요성

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후준비 필요성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노년은 더 이상 생애의 짧은 말기가 아니다. 과거에는 은퇴 이후의 삶이 비교적 짧았고, 노후는 가족의 부양과 공동체의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감당되는 시기로 여겨졌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연장되면서 노년기는 20년, 길게는 30년 이상 지속되는 독립적인 생애 단계가 되었다. 이제 노후는 단순히 일을 그만둔 뒤 남는 시간이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다시 조직하고 의미를 재구성해야 하는 긴 시간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 속에 계획적으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생애는 취업과 결혼 그리고 자녀의 양육에서 마무리되며, 노후는 준비 없이 맞이하는 미지의 영역이다. 노후준비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살기 위한 설계이며 자기 삶의 기획이다. 구체적으로 노후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갖는 긍정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개인의 삶에서 노후준비는 우선 선택 가능성을

넓혀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든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을 생계, 질병, 돌봄, 외로움의 압박 속에 가두기 쉽다. 소득이 부족하면 생활 방식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신체적 자유가 제한되며, 사회적 관계가 약하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상대가 없다. 반면 노후를 미리 준비한 사람은 노년기를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노후준비는 길어진 노년기를 수동적으로 견디는 삶에서 능동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바꾸는 출발이 된다.

노후준비는 또한 자기 이해의 과정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족부양, 자녀교육, 직장생활, 주거마련이라는 생의 과업을 수행하느라 자신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충분히 돌아보지 못한다. 래슬렛(Laslett, 1991)이 말한 대로 청장년기는 ‘사회적 의무 수행’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와 노년은 기존 역할이 약화되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만든다. 노후준비는 이러한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도록 돕는다.

특히 노후준비는 불안의 대상을 통제 가능한 과제로 바꾼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후는 많은 사람에게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연금은 충분할지, 아프면 어떻게 될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지 등 노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불안의 요소가 된다. 다수의 사람들은 이 불안을 직시하기보다 노후에 대해 회피하는 전략을 선택한다. 은퇴와 노후가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것임을 알지만 닥

칠 때까지 미루어 두는 것이다. 노후준비는 이러한 불안을 구체적인 점검과 실천의 목록으로 전환하는 행위이다. 물론 준비가 모든 위험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능동적 감각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노년기 삶의 심리적 안정과 주체성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나.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

노후준비의 긍정적 의미는 개인의 삶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상의 사회적 순기능이 있다. 노후준비는 고령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개인의 자기관리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공공적 행위이다. 노후준비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한국의 복지지출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2011~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7%의 약 2배에 달했다(국회예산정책처, 2026). 특히 노인복지예산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복지예산은 2014년 6조 3848억 원에서 2025년 27조 4913억 원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2025년 기초연금 예산만 21조 8645억 원에 이른다(참여연대, 2024). 물론 국제 비교의 관점에서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지난

2000년대 이후 높은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 증가가 노인의 삶의 질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35.9%로 여전히 OECD 최고 수준이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은 54.9%에 달한다(e-나라지표, 2026). OECD 비교에서도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약 39.7%로 OECD 평균 14.8%의 약 2.7배이다(OECD, 2025). 노인 자살률 역시 심각하다. 2024년 65세 이상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37.9명으로 전체 자살률 29.1명보다 높고, OECD 평균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5; 2025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5.5%, 사회·경제적 성취에 만족한 비율은 33.2%에 불과한 통계 결과(국가데이터처, 2025)는 한국 노인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지 않음을 보여 준다.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이 훨씬 가혹하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는 가정 아래 실시된 장기 사회보장 추계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2040년 20.5%, 2060년 28.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사회보장위원회, 2018). 이 중 고령화가 증가분의 대부분을 설명하는데, 보건·의료와 노령·유족 지출만 2060년까지 각각 8.8%포인트, 7.6%포인트 늘어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6년 30%, 2050년 40%, 2072년에는 48%

에 육박한다. 노년부양비는 현재 29.3명(생산연령 인구 100명당)에서 2050년 77.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예정이다. 이선화·장채윤(2025)은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만으로 2065년에 GDP의 약 10%에 달하는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국가채무비율은 2050년을 전후해 GDP 대비 1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다. 특히 의료·요양 수요가 집중되는 후기고령자(75세 이상)의 비중이 확대되면 비용 급증은 구조적으로 불가피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재정만 한계에 부딪힐 뿐 노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달라져야 할 지점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사후적 대응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한국의 노인복지 지출 증가는 상당 부분 사후적 현금 보전에 집중되어 있다. 기초연금, 장기요양, 노인 일자리 등은 중요한 안전망이지만, 이미 노년기에 진입한 뒤의 빈곤·질병·고립·돌봄 등에 대응하는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빈곤율을 일부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 노년 이전부터 누적된 각종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소위 노년의 4고(苦)는 노년기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는다.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 경력, 짧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 경력단절, 자녀에 대한 지출, 건강관리 부재, 여가 경험 부족, 관계망 축소 등은 40~50대부터 꾸준히 누적된다. 둘째,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한다면 정책은 노인들의 다양성을 반영한 비경제적 삶의 질 영역을 충분히 겨냥해야 한다. 소득 보장은 노인들의 생존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지만, 소득 지원만으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 가령 행복, 관계, 존엄, 역할 상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노후준비지원제도는 노인이 된 이후의 빈곤·질병·고립에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기존 노인복지제도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을 취한다. 「노후준비지원법」에서는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에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개인의 대응 역량을 키우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였다. 다시 말해 노후준비지원제도는 사후 처방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며, 직접적인 현금 이전이 아니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제기한 전환의 요구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사회적 비용의 효율화와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가적인 긍정적 효과도 갖는다.

3 한국 노후준비지원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

가. 노후준비지원제도의 발전 과정과 현황

정부와 민간이 노후준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가 경험한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그로부터 파생된 사회문제들이 자리하고 있다. 인구고령화가 본격적인 사회적 의제로 부상하고, 이

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된 노무현 정부 말기부터 국민의 노후준비를 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정부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화된 급여 제도나 프로그램만으로는 국민 각자의 생애사만큼이나 다양한 노후 삶의 질 문제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다시 말해 노년기의 삶은 표준화된 정책 수단만으로 설계될 수 없으며, 궁극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조건과 선호에 따라 자율적으로 노후를 구성해 갈 수 있도록 공적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이 점차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동시에 ‘신노년’,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라는 담론이 부상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전 세대에 비해 교육수준과 인적자본이 높은 베이비붐세대가 대규모로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이들의 잠재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부문에서도 노후준비 관련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로 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노후보장 관련 금융상품이 확대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긍정적 태도를 확산시키는 것은 상품 판매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공공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각 기관의 고유 업무와 연계하여 노후준

비 관련 프로그램을 선도적으로 개발하였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의 노후생활을 재무, 건강, 일, 주거, 여가, 대인관계의 여섯 영역으로 설정하고, 각 영역에 대한 종합적 정보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CSA(Consulting on Successful Aging) 사업을 추진하였다. 공단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2006년 10월부터 교육 이수자에게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소정의 자격시험을 통과한 경우 자체 노후준비상담사(CSA) 자격을 발급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는 이 과정을 거쳐 양성된 상담사들이 각 지사의 상담 창구에서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역시 2006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7년부터 제3기 인생 설계, 즉 노후준비와 관련한 은퇴 후 생애설계서비스(PBL)와 노인생애경력조언자(SLCA)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특히 SLCA 양성 사업은 노년기 생애 경력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전문상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사업은 은퇴한 노인 인력을 노후준비상담사로 교육하여 새로운 일자리 영역을 창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와 노인 일자리 정책을 결합한 초기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 인프라를 구축한 사례도 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의 실버플래너 프로그램처럼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시도되었다(이소정 외, 2010).

그러나 노무현 정부 말기에 형성되었던 노후준

비서비스에 대한 관심은 정권교체 이후 한동안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가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이르러 다시금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당시 정부는 ‘백세사회’라는 화두를 제시하며 증가하는 고령 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OECD 국가 중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라는 부정적 지표가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회자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했다. 누구나 맞이하게 될 노년기가 ‘길고 어두운 터널’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완화하고 국민의 능동적 준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12년 정부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쾌한 첫걸음!’이라는 슬로건 아래 본격적인 대국민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추진하였다. 미리 준비함으로써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대인관계, 건강, 재무, 여가 등 주요 영역별 노후준비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자신의 노후준비 수준을 점검하고, 노후 생활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고자 했다(보건복지부, 2012. 7. 15.; 2012. 12. 3.).

이후 2015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이른바 새로마지플래네 ‘노년기 생애 대비 노후생활설계 강화’가 추진 과제로 포함되면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범부처 정책과제의 일부로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노후설계 관련 조항이 추가되면서 국민이 자신의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고

록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의 영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책임이 명시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노후준비서비스가 포함된 이후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화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되었다. 그 결과 2015년 6월 「노후준비지원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은 노후준비를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질병·무위·고독에 대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노후준비서비스를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이는 노후준비를 단순한 개인의 재무설계가 아니라 노년기 삶의 질을 구성하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공적 사회서비스로 위치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노후준비지원법」은 국민연금공단 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동시에 관련 콘텐츠 개발,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 노후준비에 대한 홍보와 인식 제고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법적 근거와 제도적 전달체계를 동시에 갖춘 사회서비스로 출발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노후준비지원법」은 5년마다 노후준비 지

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2016년 ‘제1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16~2020)’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서의 형식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동력과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노후준비서비스 인프라 부족, 예산 미확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간 협업 미흡으로 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과제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였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와 홍보 대상이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에 편중되는 한계를 드러냈다(황남희 외, 2020).

2021년에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2021~2025)’이 발표되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전 세대의 노후준비 참여 제고’와 ‘노후준비 서비스 품질 제고’를 양대 목표로 설정하고,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및 정책 기반 강화, 노후준비 지원 인프라 강화, 노후준비 인식 및 참여 제고라는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의 구체적 과제들은 제1차 기본계획의 연장선에서 보완·발전된 성격을 갖지만, 특히 주목할 변화는 전달체계 개편이었다. 제1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서비스 제공 체계가 보인 한계를 극복하고, 노후준비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다.

기존 체계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가 국민 대

상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최일선 전달체계로 기능했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지역 내 법인,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을 광역 또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의 직접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21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이 개정되었고, 2022년에는 부산과 순창에서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었다.

2021년의 법 개정으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제도적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초기 모델을 넘어 중앙-광역-지역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전달체제로 전환되는 단계에 들어섰으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아직 지역사회 중심 보편적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과도기적 상태에 놓여 있다. 애초 의도되었던 핵심 변화는 노후준비서비스를 국민연금공단 지사 중심의 부가적 상담 서비스에 벗어나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역 기반 서비스로 확장하려는 데 있었다. 2021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개정을 통해 시·도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가와 국민연금공단이 표준화된 콘텐츠와 전문인력 양성, 정보 시스템을 담당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기획과 자원 연계를 담당하는 거버넌스를 상정한 변화였다.

그러나 2025년 현재까지의 실제 확산 수준은 제

한적이다. 황남희 외(2025)에 따르면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는 시범사업과 본사업을 거쳐 광역센터 2곳, 지역센터 7곳이 지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부산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와 인천 고령사회대응센터가 광역센터로 지정되었고, 부산 북구 공창종합사회복지관, 부산 사상구 노인장애인복지과, 김제 노인종합복지관, 춘천 지혜의 숲, 서울 성동 50+센터,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대전 서구 노인장애인과 등이 지역센터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 중심 전달체계가 제도적으로 가능해졌음에도 실제 운영에서는 지자체의 참여 유인 부족, 별도 국고 지원 미흡, 담당 인력과 사업 이해도 부족, 지역별 인프라 격차가 여전히 중요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황남희 외, 2025).

다른 한편 디지털 사회로의 진입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제2차 기본계획 기간 동안 공·사연금 통합조회시스템이 확대되었으며,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등 9종의 연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노후준비 종합진단, 노후자금 간편진단, 상담 및 교육 신청, 온라인 교육, 일부 비대면 상담서비스가 제공되었다. 이는 노후준비서비스의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기반을 확대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나. 노후준비지원제도의 성격

이상의 과정을 종합하면 한국의 노후준비지원서

비스는 정책 전문가 집단, 정부 관료, 유관 공공기관 주도로 도입된 전형적인 하향식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이 도입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서구 복지국가의 제도나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도입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특정 사회문제가 여론화되고 복지 공백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된 이후 정부가 사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이 두 경로와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인다. 해외에서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정책 모형을 찾기 어려웠고, 국내에서도 관련 문제가 대중적으로 여론화되거나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법적 근거까지 갖춘 제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정부

관료, 전문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의 정책적 추진력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료는 국민들에게 긍정적인 노후 이미지를 심어 주고, 개인이 자신의 노후를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고령사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반면 전문가들은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다 근본적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복지정책이 사후 보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과 역량 강화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이소정 외, 2014). 국민연금공단 역시 제도 확산의 중요한 행위자였다. 특히 2011년 건강보험공단 중심의 4대 보험 징수 통합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기관의 역할과 영역을 재정립해야 하는 지속가능성의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고령사회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새롭게 확장할 수 있는 정책적 영역이자 제도

[표 1] 노후준비지원 제도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6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애설계사 프로그램 PBL, SLCA 시작
2008년	국민연금공단 CSA 사업 실시
2012년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공동 노후준비진단지표 개발
2015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노후준비 과제 포함
2015년	노후준비지원법 제정 및 시행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실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2016년	제1차 노후준비 기본계획(2016~2020) 발표
2020년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2021~2025) 발표
2021년	노후준비지원법 개정
2022년	지방자치단체 중심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실시(부산, 순창)

출처: “생활체감형 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 이소정 외, 2023, 여성가족부, p.118 <표 3-2>를 이용하여 작성.

적 블루오션으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정부 관료, 전문가, 유관기관의 이해와 문제의식은 노후준비지원 서비스가 ‘위로부터 아래로’ 추진되도록 만든 핵심 동력이었다.

여기에 더해 ‘노후준비’라는 개념 자체가 갖는 탈 정치성과 보편성도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노후준비는 친복지 또는 반복지의 이념적 대립을 상대적으로 덜 유발하는 개념이다. 더욱이 고령화가 강력한 사회적 화두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준비’는 그 자체로 보편적 동의를 얻는 용어이다. 복지 확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예방적 사회서비스이자 삶의 질 향상 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고, 복지지출 확대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개인의 자기책임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정책으로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양면성은 정당과 이념을 초월해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이는 노후준비지원법 제정이 갈등 없이 이루어진 배경이기도 하다.

4 노후준비지원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라는 강력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인 이유는 단순히 홍보 부족과 인식 부족, 혹은 특정 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제도가 한국 복지정책 체계 안에서 명확한 정책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예방적 서비스가 갖는 구조적

한계와 중앙·지방 간 불완전한 거버넌스, 그리고 복지예산 배분 구조의 제약 속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우선 노후준비지원제도는 정책 정체성이 애매하다.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을 다루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지서비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애설계 교육, 금융상담, 건강증진, 평생교육, 사회참여 지원, 지역자원 연계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 이러한 포괄성은 제도의 장점이지만, 행정체계 안에서는 오히려 약점으로 작용한다. 가령 기초연금은 소득보장정책이고, 장기요양은 돌봄정책이며, 노인 일자리는 고용·사회참여정책이라는 정체성이 비교적 분명하다. 반면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복합적이고 또 모호하다. 그 결과 국민연금공단이 담당하면 연금·재무 중심으로 축소될 위험이 있고, 지자체가 담당하면 평생교육이나 중장년 지원 사업의 부가 프로그램으로 흡수될 위험이 있다. 노후준비지원제도는 마치 건강검진처럼 가치재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역량 강화형 사회서비스로서 보편성과 개별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제도이지만, 바로 그 복합성 때문에 복지행정의 분절적 틀 안에 안정적으로 위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예방적 정책이라는 속성 자체도 제도 발전의 동력을 약화시킨다. 예방 정책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입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노후준비서비스가 성공하면 미래의 노인빈곤, 고독, 질병,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그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성과로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기초연금, 의료비 지

원, 장기요양, 노인 일자리처럼 이미 발생한 결핍에 대응하는 정책은 수혜자와 예산 규모가 명확하고 정치적 가시성이 높다. 한국의 복지예산 배분 구조는 대체로 법정급여, 현금급여, 위기대응, 대규모 수급자 사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재정 당국과 정치권 모두 단기간에 산출이 확인되는 사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적·간접적 효과를 갖는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예산 경쟁에서 후순위로 밀리기 쉽다. 예방 정책은 사회적으로 가장 합리적일 수 있지만, 행정과 정치의 프레임 안에서는 가장 덜 긴급한 정책으로 취급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인다.

셋째, 수요 창출에도 실패하였다. 노후준비는 누구나 중요하다고 인정하지만, 즉각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전형적인 미래지향적 과제이다. 사람들은 현재의 생계, 자녀교육, 주거비, 부채, 직장생활의 압박 속에서 먼 미래의 노후를 우선순위로 두기 어렵다. 특히 40~50대는 노후준비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시간과 심리적 여유가 가장 부족한 집단이다(이소정 외, 2023). 여기에 '나중에 어떻게 해결되겠지' 하는 낙관편향, 금융·연금 정보를 비롯한 기타 노후생활 관련 정보에 대한 낮은 접근성, 노후를 직면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회피가 결합되면서 자발적 이용 수요는 낮게 형성된다. 결국 노후준비서비스는 법정 제도임에도 국민의 생애주기 속에 자연스럽게 접속되지 못했다.

넷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와 전문성 축적도 정체되어 있다. 노후준비 상담이 실

질적 효과를 가지려면 단순한 체크리스트식 진단을 넘어 생애주기, 성별, 소득계층, 가족형태, 고용상태, 지역환경, 건강상태에 따라 다른 상담 콘텐츠와 교육자료가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력단절 여성, 자영업자, 1인 가구, 불안정 노동자, 은퇴 예정자, 가족돌봄자에게 필요한 노후준비 내용은 서로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세분화된 콘텐츠 개발과 상담 매뉴얼 고도화에는 연구개발비, 전문인력, 현장 환류체계가 필요하다. 예산과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며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만족스럽지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수요가 확산되길 바랄 수 없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수요 창출은 훌륭한 서비스가 불씨가 되어 소문을 타고 확산될 수 있다.

다섯째,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플랫폼 구축 역시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여전히 '종합 플랫폼'이라기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존 온라인 서비스에 노후준비 관련 기능이 덧붙여진 형태에 가깝다. 즉 연금조회, 자가진단, 상담신청, 교육신청, 상담기록, 기관연계, 사후관리 기능이 존재하더라도 이들이 개인의 생애 위험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계하는 통합적 데이터 기반으로 충분히 결합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지향하는 플랫폼은 단순한 정보 제공 사이트가 아니라 진단-상담-교

육-연계-사후관리-성과평가가 하나의 순환구조로 작동하는 생애설계 지원체계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보시스템은 이용자 정보, 상담 이력, 진단 결과, 지역사회 자원, 서비스 이용 성과를 전국 단위 데이터 자산으로 축적하고 분석하는 기능이 제한적이다. 지자체 현장의 서비스 경험이 중앙의 콘텐츠 개선과 정책 환류로 이어지는 구조도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 또한 개인의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영역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위험을 예측하고, 필요한 교육·상담·지역자원을 추천하며 이후 행동 이행 여부를 추적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는 아직 향후 과제로 제시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황남희 외(2025)가 AI 기반 자가진단, 대화형 챗봇 상담, 은퇴 시뮬레이션, 행동 리마인더, 주기적 재진단 등을 포함한 노후준비 종합 플랫폼 고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여섯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기능 배분 및 지방정부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간 거버넌스 확립이 불완전하다. 한국의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제도를 설계하고 재원을 배분하며, 지방정부가 집행을 담당하는 구조가 강하다. 그러나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지역사회 자원 연계와 주민 접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문제는 지자체가 노후준비서비스를 핵심 복지사업으로 추진할 만큼의 명확한 재정지원, 책무, 성과관리 체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간의 역할 분담은 더욱 모호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

지원센터로서 콘텐츠와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 대해 직접적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고,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에는 동의하더라도 자체 예산과 인력을 투입할 유인이 약하다. 2021년 법 개정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 상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사를 20곳에서 40곳으로 확대하고,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콘텐츠, 전산시스템, 홍보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책임성과 조정 권한이 불명료한 이중 거버넌스의 문제는 제도 개혁 이후에도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확산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존 체계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이자 지역 지사를 통한 직접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반면 법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사회 안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지자체 지정 센터가 병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문제는 두 체계가 상이한 상부조직, 예산체계, 평가방식, 운영목표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공단 내부의 정량적 성과관리와 중앙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반면 지자체 지정 센터는 지역주민 체감도, 지방정부의 사업 우선순위, 보조금 집행체계 등 다른 요소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로 인해 두 기관 사이의 역할 분담, 서비스 대상자 조정, 콘텐츠 공유, 성과관리, 사후관리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못할 위험성이 도출되고 있다(황남희 외, 2025). 이러한 구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서 지자체를 적극

적으로 견인하고 지원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발생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준비서비스의 콘텐츠, 상담 매뉴얼, 교육과정, 진단도구, 전산 시스템 운영 경험을 축적해 온 기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명령권이나 재정배분권을 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지자체가 노후준비지원서비스를 자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별도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중앙센터의 지원은 교육자료 제공, 시스템 승인, 운영 안내와 같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의 전환이 제도적으로 선언되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지자체 센터가 병렬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사 서비스를 중복 제공하며 협력체계 구축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결국 전달체계 개편은 지자체 참여의 경로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중앙·광역·지역 간 권한, 책임, 자원, 성과관리 체계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직 안정적 거버넌스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5 나가며: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더 많은 상담을 제공하거나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지 않다. 노후준비를 개인의 책임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개인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내실 있는

공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앞서 노후준비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짚어 보며 노후준비지원제도의 포괄성, 예방적 속성으로 인해 복지정책 프레임 안에서 부차적으로 취급되는 정책 정체성, 국민적 인식 확산 실패, 콘텐츠와 전문성 축적 미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스 확립 등을 제기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각각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준비지원제도의 정책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무엇보다 정부 당국과 정책 전문가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된다. 노후준비지원서비스는 투자적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투자는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을 수치화하는 협소한 의미의 투자가 아니다. 예방적 정책의 효과는 상담 건수, 교육 참여자 수, 단기 만족도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노후에 대한 불안을 덜고 능동적인 삶을 만들어 가는 것,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을 준비를 하는 것,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것, 은퇴 이후의 시간을 의미 있게 상상하고 기대하게 되는 것은 쉽게 숫자로 환원되지 않지만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숫자가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숫자로 잘 포착되지 않는 삶의 변화야말로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지향해야 할 핵심 성과일 수 있다.

둘째, 노후준비지원제도의 국민적 인식 확산 실패는 소위 ‘홍보의 확산’이라는 즉각적인 수단을 통해 부분적으로는 해소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해결

되기 어려운 성격을 갖고 있다. 전술했듯 홍보와 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노후준비에 대한 인지도와 인식 수준을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노후준비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국민들의 복합적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파급력은 낮을 수밖에 없다. 결국 양질의 노후준비 콘텐츠 개발이 관건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과 배경 그리고 선호에 부합하는 양질의 노후준비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그만큼의 서비스 경험과 인력, 데이터가 필요하다.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지만, 시대적 기회를 활용해 가장 간편하게 출구를 모색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는 개인의 연금, 건강, 고용, 부채, 주거, 관계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생애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구축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플랫폼은 공·사연금 조회와 온라인 진단이라는 차원을 넘어 초고령사회에 필요한 예방적·개별화된 노후준비 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연계, 서비스 통합, 지자체 현장과의 환류, AI 기반 사후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기술은 분명 노후준비와 같은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가 맞춤형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조해 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디지털 기술은 인간 상담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상담의 접근성과 정교성을 높이는 보조적 인프라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후준비는 결국 숫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진정성 있는 삶의 방향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성공적 거버넌스를 만들어 가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의 생활세계에 가깝고 지역자원을 동원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지자체만으로는 표준화된 진단 도구, 전문인력 양성, 서비스 품질관리,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감당하기 어렵다. 반대로 중앙과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적 전문성과 정보 인프라를 갖고 있지만, 지역주민의 구체적 삶에 밀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은 표준화, 재정지원, 플랫폼, 질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지역특화 서비스와 자원 연계를 수행하는 기능적 분업과 근원적 협력이 필요하다.

노후준비지원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한국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를 내포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복지국가가 주로 위험이 발생한 뒤 소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후대응 체계였다면 앞으로의 복지국가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기 전에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역량강화적 체계로 확장되어야 한다. 노후준비지원제도는 바로 그 전환의 실험장이다. ■

참고문헌

- 국가데이터처. (2025). **2025 고령자 통계**. https://moids.go.kr/board.es?act=view&bid=10820&list_no=438832&mid=a10301010000
- 국회예산정책처. (2026).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준과 신규 과제**. <https://www.nabo.go.kr/board/file/bulkDown.do?bid=68&idx=9157>

보건복지부. (2012. 7. 15.).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민간과 공동으로 노후준비지표 개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12. 12. 3.). **행복한 노후를 위한 유쾌한 첫걸음! 복지부, '노후준비지표' 네이밍 및 슬로건 공모전 개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5).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제1차 포럼 개최**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6054&mid=a10503010100&nPage=1&tag=

사회보장위원회. (2018).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 2018-2060**.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이선화·장채윤. (2025).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 전략” 「인구통계 Brief」 제 25-5호, 국회미래연구원.

이소정, 정경희, 김경래, 이은진, 강인, 이금룡, 한정란. (2010). **노후설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보건복지부.

이소정, 김수영, 김은하, 이금룡, 한정란. (2014).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수립 및 콘텐츠 개발 연구: 노후설계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연구**.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소정, 신규수. (2023). 생활체감형 정책 특정성별영향 평가: 노후준비지원제도. 여성가족부.

참여연대. (2024).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노인복지 분야. **월간복지동향**.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79491>

황남희, 김경래, 박은자, 주보혜, 임정미, 김혜수, 이소정, 성혜영, 유재언, 김재호, 이금룡. (2020).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보건복지부.

황남희, 이선희, 박은자, 이혜정, 최경덕, 이소정, 성혜영, 김난주, 김재호, 김은지, 오신희. (2025).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나라지표. (2026). **65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 추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24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OECD. (2025). *Pensions at a glance 2025: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e40274c1-en>

The Rationale and Current Status of the Old-Age Preparation Support System

Lee, So-Chung

(Namseoul University)

Korea's Old-Age Preparation Support System emerged in response to Korea's particular social circumstances. Preparation for later life is a process through which individuals, by planning ahead for their income, health,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meaning of life, seek to maintain their freedom and autonomy into old age. At the social level, it forms part of an effort to reduce in advance the risks of poverty, ill health, loneliness, and social disengagement. Equipped though it is with a legal foundation and with a delivery mechanism through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this system has yet to develop sufficiently, constrained by its top-down approach, low public awareness, lack of a clear policy identity, an un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ie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limited platform functions and service content. Policymakers will need to consider harnessing digital technology to provide more customized support, while also establishing a governance mechanism that connect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s standards and platform functions with resources available at the local level and adopting a perspective that views old-age preparation support as part of a preventive, social-investment strategy that captures even the changes in individuals' lives that numerical indicators may fail to captur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Old-Age Preparation Support System could represent a significant step toward shifting Korea's welfare state from reactive intervention to a preventive, capacity-building paradigm.